

투데이 칼럼

민주주의의 발원지는 고창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링컨은 국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표현한 바 있다. 한마디로 민중이 중심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필자는 당연히 조선 후기 고창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한다. 예술과 종교, 민중운동이 고창에 들어와야 비로소 원래 기능을 뛰어넘어 주체적 민중이 중심되는 민주주의 토대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고창에서 민주주의로 진화된 역사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판소리가 진화된다. 구전으로 떠돌던 유희(遊藝)의 판소리가 조선 후기 동리 신재효에 의해 개작·정리되면서 주체적 민중이 주인공인 예술로 발전된다. 실제 신재효는 판소리 여섯마당 전반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담화공간을 의도적으로 확장·조성해 놓고 있다.

일례를 들면 현전 「적벽가」 필사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1870년



전민중 고창군청 문화시설팀장

추정)의 소설로 언급된 <화용도전>의 경우 단 3명의 장졸이 등장한다. 그러나 신재효본 <적벽가> 군사실용 대목은 조조에게 불만을 품은 장졸들을 7명이나 등장시켜 전쟁과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하고 인권중요성을 집적화시키고 있다.

둘째, 동학이 진화된다. 동학이 고창에 들어와서는 본연의 종교 기능을 뛰어넘어 주체적 민중이 시대의 중심임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성격으로 정치화한다. 황현의 『오하기문』과 김재홍의 『영삼일기』 기록에 의하면 1892년 8월 선운사에서 고창 무장 동학접수 순화종과 300여명의 신도들에 의해 기획적으로 '미륵석불 비기 탈취사건'이 일어난다. 조선 왕조를 멸망케

한다는 천지개벽의 비결을 입수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무장·고창·흥덕·영광·부안·고부·정읍·태인·전주·금구 등에서 동학도의 수가 수만명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이를 계기로 들불처럼 번져 그해 10월과 11월 충청도 공주와 전라도 삼례에서 각각 이점과 다르게 반봉건 정치 색깔을 띤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난다. 나아가 1893년 2월 광화문 북합상소에 이어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금구·원평에서도 군중집회가 발발한다.

셋째, 민중 봉기도 진화된다. 조선 후기 1800년대 일어난 100여건의 봉기들은 탐관오리에 대한 지역 내 징벌과 최고권력자로 하여금 인사조치 해달라는 피동적 차원의

민란이다. 반면 부정부패가 한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간파한 데서 출발한 고창 무장 봉기는 개혁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서 기획적으로 일어났음을 선포한 발전된 민중운동이었다. 실제 동학농민혁명 고창 무장 포고문에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글과 '은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수많은 백성이 의논을 모아...'라는 문장에서 주체적 민중이 시대의 중심임을 선언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부패한 권력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일어난 광화문 촛불혁명과 6월 항쟁,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3·1운동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주체적 민중이 중심인 지금의 판소리와 동학, 동학농민혁명을 있게 한 고창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을 통해 민중이 중심인 세상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며,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고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고문

회복적 경찰활동 정착을 기원하며

1974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엘미라에서 청소년 2명이 밤에 음주 후 동네를 돌면서 길로 주차된 차의 타이어를 찢고 도로 침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22가구가 피해를 입은 사건은, 가해자·피해자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평온과 관계회복을 유지한 대표적 회복적 정의 사례이다. 회복적 정의를 사법체계에 적용한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 하는데 이 사건으로 회복적 사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형사조정위원회(감할), 화해권고제도(법원)에 나타나 있다. 잘못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바로잡는 응보적 정의와는 달리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갈등·분쟁 해결과정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회복하고 당사자의 관계회복 및 지역사회에 평온을 추구하는 이념을 말한다.

경찰은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이 사건발생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개입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역공동체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작년부터 수도권 15개 관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남원을 포함하여 전국 130개 경찰서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두 당사자가 대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적 대화 모임을 제공하고 있다.

회복적 대화 모임은 민간 대화 전담기관의 주제로 진행되며, 경찰관과 가해자·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이나



양예라 남원경찰서 청문감사관사실

이웃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회복, 관계 개선,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였다면, 그 결과와 보고서 형태로 수사자료에 첨부되어 재판에서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조치 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증간소음, 절도, 폭행 등의 영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하여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법원에서 실현한 회복적 사법을 경찰단계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처벌 중심으로 하는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중심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잘 정착되길 기원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재난관리 전국 최고 평가에 부처

전북도의 재난 관리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가 나왔다. 행안부의 그같은 평가로 대통령으로부터 기관 표창도 받고 특별교부세 6억 원도 확보했다는 보고이다.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니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 전북도에 게 할 말이 있다.

올 여름 폭염이 특심할 거라는 예보와 관련해서 말이다. 오래 전 1994년도와 재작년인 2018년도가 생각나는 것이다.

폭염이 닥치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 안전 관리와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미리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겠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늘 보도되는 게 안전사고 뉴스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에 무심경하다. 그러나 전북도는 그런 사람들도 챙겨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계몽하고 또 고령의 노인들을 포함해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체크해 파악해두고 있어야 한다.

아직 피서지를 언급할 때는 아니지만 며칠 전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때 이르게 해수욕장이 개장될 터이다. 해수욕장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안전 사고이다. 따라서 피서

지를 찾는 이들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행이 자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마다 피서지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데 피서객들이 안전요원의 주의 사항 고지를 들은 척도 않고 있음이 그 주된 이유일 터이다. 취객이나 젊은이 중에는 무모하게도 위험 수역에서 헤엄치다가 일을 내고 있는데 당국은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두고 있어야겠다.

안전하다 싶은 풀장에도 지난날에 문제가 많았다. 안전요원이 자기의 책무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빈번하게 확인되었던 것이다. 아들의 경우, 보호자의 과실이 먼저 지적돼야겠으나 수영에 익숙한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것은 수영장 안전 요원의 책임이 크다. 안전하다는 수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안전 사고 예방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다. 공공 위락시설이며 수영장이 여름철 위생의 사각지대로 늘 지목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 못지 않게 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상선약수의 지혜로 증액된 예산 확보를

전북도가 '상선약수'의 지혜를 모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곧 송하진 도지사 의지이기도 할 터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자생어로 도정의 방침을 수차례 밝혔던 적이 있다. 얼른 생각나는 것만해도 '절문근사' '춘화추실' 등이 있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에 보통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겠다. 지역 발전은 예산 증액 확보가 답이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테지만 역시나 최고의 해법은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무슨 일이고 돈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면 아무리 발전 열망이 뜨겁다 해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예전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산 증액 확보는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전북도는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생각해 야 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순환 도로며 신공항 건설이며 내무 개발 사업 등을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가 때때마다 강조했던 바

핵심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답이다.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북도는 좀 더 면밀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럭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도민에게 여러 차례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래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 어렵다.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을 안고 있는 세월이다. 그러므로 예산처럼 짐장은 행보는 마무르지 않다. 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더 뛰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